24일 오전 국회 중앙홀 본회의장 입구에서 이틀째 점거농성중인 민주당 '국민모임-다시 민주주의' 의원들이 한나라당 단독국회 개회 반대와 MB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차 입법전쟁' 국회 전투모드로

## 한나라 "민주당은 점거 상습정당" 민주 "미디어법 강행 결사 저지"

국회에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 임시국회 개회를 굽히지 않고 있고 이에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으나 여야 간 물밑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26일 회기 시작과 함께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3차 입법전쟁을 준비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여론 우위 선점을 위해 단독 개회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우리가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대화의 창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도 국민이 외면하는 짜증스러운 장외투쟁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수폭력과 국회 점거농성을 상습적으로 하는 비민주적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6일 회기 시작에 이어 29일 전 상임위 소집 등을 통해 비정규직법·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공무원연금법 등의 처리 수순을 밟아갈 예정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번 국회 회기 중 비정규직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처리하되 미디어법의 경우 다소 융통성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강경파 초재선 의원 18명이 본회의장 앞 중앙홀 점거농성을 이틀째 계속했다. 또 한나라당이 개회를 하더라도 전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강행하려는 근본적 목표는 오직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국회'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할 경우 미디어법 처리를 막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 물리적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법에 대해선 당내 온건파 의원들도 대부분 실력저지가 불가피한 법안으로 생각할 정도로 당 분위기가 강경하다. 일각에선 삭발과 단식, 장외투쟁은 물론 의원직 사퇴 등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생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문제를 분리,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해법 마련을 위한 여야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해 분리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5인 연석회의를 꼭 성공시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이 협상(5인 연석회의)을 깬 뒤 29일이나 30일 국회의장을 압박,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천성관 검찰총장,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30억 당비대납 의혹' 금융자료 조사

## 법원, 해당은행에 자료 제출 명령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과 관련, 법원이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은행에 금융자료제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나라당이 '30억 특별당시 대납의혹'을 제기한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이 맞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금융거래 자료가 제출되면 자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 위원인 이재명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등의 해명을 종합하면 천 회장이 2007년 11월 A은행에 30억원을 예금했으며 이를 담보로 이 대통령이 대출을 받아 당비를 냈다"며 "이 대통령은 또 2008년 5월 B은행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 5개월 만에 A은행의 대출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친구인 천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공연히 금융기관을 끼고 예금담보대출 형식을 만드느라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4천만원 이상의 불필요한 돈을 쓴 것은 뭔가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 자료와 수표추적 등을 통해 30억원이란 돈이 한나라당 등의 주장대로 이동했는지, 이 대통령이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냈는지 등을 살펴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정상이 아니란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충청권 연대'로 난국 돌파하나

## 이회창·이완구 총리설 '솔솔'

## 민주당 '호남 고립' 경계 눈길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내정자를 모두 충청 출신을 고용한 것과 관련, 여권에서는 '충청연대론'이, 야권에서는 '호남 고립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과 국세청의 수장을 충청 출신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장기적 측면의 충청권 공략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29 재보선 참패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거치면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권이 자유선진당과의 연대 등을 통해 현재의 수세 국면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유도, 차기 정권 창출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 일각에선 다음 개각이 있을 경우 충청권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승수 총리가 교체된다면 차기 총리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 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등이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6월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선진당의 행보에 따라 '충청 연대론'의 향후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는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하지 못하면 내주 월요일(29일) 등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등원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정자가 충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권이 '호남 고립'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의 충청 기반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적으로 호남만 고립되는 구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공학적인 인위적인 연대는 역풍을 부를 가능성을 큰데다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2013년 신문·방송 겸영금지 해제"

## 미디어위, 최종 보고서 오늘 제출… 논란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24일 오는 2013년 이후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신방겸영 금지를 유지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이날 "이번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는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 등 3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점인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는 법 개정이 되면 겸영이 곧바로 허용된다. 지분율과 관련, ▲한나라당안 유지 ▲49%로 일괄 규정 ▲가시청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에만 기업진입 허용 등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역경제권 '5+3' 재조정 균특법 개정 추진

## 민주 광주·전남지역 의원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기존 '5+2 광역경제권'을 '5+3'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및 노영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은 2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광역경제권 재조정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시행령 개정시 광역경제권을 '5+3'으로 설정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한나라당과 국회 의견 수렴이라는 여야 합의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